大學教授의 教育活動 방향

崔 相 天
(曉星女大 歷史敎育科)

1. 民族史의 課題와 大學敎育의 方向

거시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장엄한 인간 해방의 역사이다. 인간 해방은 두 가지의 억압을 극복하는 투쟁을 통해 실현되어 왔다. 인간의 자립과 자기 실현을 제약하는 가장 큰 힘은 자연력이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이 뛰어 넘어야 할 가장 험난한 대상이 된 것이다. 수백만 년의 투쟁을 통하여 인간은 자연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자연의 법칙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 그 자체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가지지는 못하게 되었다. 오히려 인간은 자연이 가진 힘을 능동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인간 사회가 극복해야 할 또다른 인간 해방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자연을 대상화하고 생산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생산물이 일부 지배층에게 집중됨으로써 야기된 이러한 현상은 자연의 질곡 못지않은 인간 해방의 질곡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질곡의 해체 없이 진정한 인간의 해방과 인류사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 해방의 사회적 과제는 개별 민족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식민지를 통해 초과 이윤이 항상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후진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 사회의 고유한 모순에 선진 자본주의의 모순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회적 모순의 체제내 개혁이 그만큼 어렵게 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간 해방의 기본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치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自主·民主·統一이라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제를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데에도 엄청난 투쟁과 댓가를 지불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와 신식민지적 지배를 받아왔다. 이러한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의 확보는 민족사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임이 명백하다. 민족간 또는 국가간의 착취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립과 민주화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화는 좁게는 국가 권력의 민주화로부터 착취와 억압의 완전한 철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다. 민주화의 과제는 민주화의 폭이 넓은 만큼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民族統一은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의 과제

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통합이나 두개 정치 권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민족 통일은 한국 근현대사에 제기된 과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민족사의 일대 변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대학은 학문을 통하여 인간 해방과 민족사의 과제를 실천적으로 규명하고,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학생의 자아 실현도 기본적으로는 민족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하여 실현되므로 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은 인간 해방과 민족 공동체의 발전을 자기의 학문적·교육적 영역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의 기본적 임무를 상실했을 때 대학은 한낱 지식 상품 시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해방 후 한국 대학의 교육 내용은 경제 발전의 기능인을 양성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데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학이 한국 사회의 민족사적 요구에 부응한 것은 대학의 교육 내용이나 교수들의 연구라기보다는 청년·학생들의 조국애와 민주 변혁 운동이었다. 대학은 오히려 이들 청년·학생이 제기하는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를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데 열중하였다. 이러한 반성의 기초 위에서 大學이 自主性을 확보하고 民族史의 課題를 자기의 學問的·敎育的 영역으로 세우기 위한 대학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대학의 민주적 개혁을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한다. 이 문제는 사회 변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층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다만 대학의 교과과정 중에서 교양과정에 한정하여 민족민주 변혁의 과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논의를 한정시키겠다.

2. 大學敎育의 民族敎育的 改革 方向과 敎養課程의 改編

1) 改編의 前提

대학의 교양과정은 몇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그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우선 교양과정을 개설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의 교양과정은 위에서 제기한 민족민주의 과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대학의 학문은 기본적으로 민족사가 당면한 문제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의 교양과정은 현재의 초등·중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갖는 엄청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교정하는 기능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즉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마비된 학생들의 창조력을 개발하는 방향에서 교양과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째, 교과과정이 교수나 행정 부처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敎養科目 選定의 方向

현행 교양과정은 총 42학점(졸업 학점 140학점의 30% 이상)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 규정 때문에 불필요한 과목을 억지로 개설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교양과정을 설정한 본래의 목적인 균형 있는 지식의 함양은 유명무실해지고 학점을 채우기 위한 강좌 개설과 억지 이수가 관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책 과목의 문제, 기능주의적 과목 배치 등 현행 제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부분적 수정으로는 교양과목 설치의 의의가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교양 과목을 앞 절에서 제기한 문제 의식에 의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임을 분명히 해둔다.

우선 교양 필수 과목의 설정이다. 교양 필수 과목은 어떤 전공을 하는 학생이나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을 가리킨다.

(1) 독서와 비평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암기식 단순 지식과 사지선다형의 지식에 젖게 된다.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고 더구나 논리적 능력이 거의 문맹에 가깝다. 이러한 편향된 교육은 물론 초등·중등교육의 개혁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마냥 교육의 전면적 개혁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미 대학에 진

학한 학생의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책을 읽고 비평하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학습 과정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물을 올바로 관찰하고 세계를 나름대로 해석하게 된다. 즉, 주어진 사실과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재해석함으로써 자주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이 과목의 목적이 있다.

(2) 한국민족운동사

현재의 세계를 민족주의 시대라고 한다. 민족문제가 현재 세계의 핵심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민족통일의 중차대한 과제가 가로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민족사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모든 인문·사회과학뿐 아니라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도 필수적인 과목이다. 다만 민족사에 대한 인식이 국수주의나 민족우월주의 등 반동적 경향으로 흐르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한국민족운동사'를 학습하는 목적은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를 명확히 밝히고 민족운동의 과제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근대 사회의 민족운동의 중심 과제, 개항 이후 민족운동의 방향과 실패의 원인,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본질과 민족 해방 투쟁의 전개 과정 등이 학습의 주요 과제가 된다.

(3) 민주주의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언제 있었던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의 교양과정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은 거의 없다. 그동안의 정권은 민주주의를 제 멋대로 해석하여 오히려 민주주의를 유린해 왔다. 기존의 권력은 민주주의를 법률주의(반민주적 악법이라도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전락시키고, 형식적 절차주의와 강제된 다수결주의를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우겨왔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주인인 국민은 소수 권력자의 하인쯤으로 취급받았다. '민주주의론'은 이러한 사이비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학습하기 위한 과목이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능성과 여러 형태를 학습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실현하고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 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의 여러 형태, 한국의 정치 현실과 민주주의 등이 주요 학습 내용이 된다.

(4) 민족통일론

민족통일은 현 시기 민족운동의 최대 과제이다. 그러나 통일 논의가 정권에게 독점되어 있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통일은 기대할 수 없다. 통일은 민족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북 정권의 통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0여 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적개심을 조장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찾는 현재의 남·북 정권하에서는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단결이 어려운 것도 숨김없는 현실이다. 우선 통일 논의 자체가 전민족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상대방을 실체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북 이데올로기와 반남 이데올로기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족 분단의 역사와 남·북의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민족통일의 학문적 접근이 요청된다. 이 과목의 중요 내용은 분단의 과정, 남·북한의 발전 과정, 남·북한 관계사, 민족통일론의 전개 과정, 동아세아 국제관계사 등이 될 것이다.

(5) 한국자본주의론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의 모순과 더불어 한국 자본주의 고유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모순 구조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 사회의 올바른 이해는 불가능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개혁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병리적 현상은 개선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또한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 국가 권력의 성격, 토대의 객관적 수준, 민중의 구성과 역량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혁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폭력과 전근대적·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전면적 수술없이 한국 민중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불가능하다. 한국 자본주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중이 권력 주

체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이 과목의 기본 목적이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 과제인 것이다.

(6) 핵과 공해

산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공해 문제는 이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졌다. 특히 한반도에 배치된 1,000여 기의 핵 무기와 10여 기의 핵 발전소는 민족의 존립에 관련되는 중대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와 핵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받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최전선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동안의 정권이 이러한 현실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권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산업 공해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핵과 공해의 문제는 그 전사회적 의의에 비추어 대학의 교양과정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

교양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되도록 많이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교양 선택으로 선정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 대학의 사정과 각 학과의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3) 敎養課程의 運營 方式

민족민주교육을 지향하는 교양과정의 설정은 과목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주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그 운영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면 이것도 문제인 것이다.

우선 학생을 교육의 한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 교육은 학생을 단순히 피교육자(교육 대상)로만 인식해 왔기 때문에 학생을 통제의 대상, 교육 내용의 무조건적 습득 대상으로 취급한 권위주의적 교육이 횡행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체제 순응적인 인간을 만드는 데는 일정하게 기여했지만, 학생의 자아 실현과 창조적 능력 개발에는 큰 문제를 가져 왔다. 학생은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있지는 못하다(사실 교육자도 인격적 완성자는 아니다. 인격의 완성이란 실체가 없는 허구에 가깝다). 그러나 학생도 인격의 주체임에는 틀림이 없다. 교육은 완성된 인격체가 불완전한 인격체를 제품을 만들 듯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인격 주체의 만남과 상호 교류를 전제로 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육에 참여하는 형식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교수(교사)는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은 제시된 내용을 질의·토론을 통해 참여한다. 그러므로 교수는 가치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과의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해석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 가치 주입은 교육이 아니라 동물 사육과 다를 바 없다.

교양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양 필수 과목으로 설치된 과목은 별도의 연구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민주주의론'이라고 하더라도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철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종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敎育 民主化와 大學敎授의 役割

이제까지 우리는 대학교육의 민족교육적 개혁의 방향과 교양과정의 개편을 논의하였다. 논의를 요약하고 몇 가지 부가되는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 교육은 민족 문제와 민주주의의 확립과는 등떨어져서 오히려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데 기여해 왔다. 교육이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시녀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숨김없는 현실이다. 이제 교육의 반민족성·비민주성을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민주·통일을 힘차게 추구하는 民族敎育과 民主敎育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이 계속 권력과 지배층의 선전을 담당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국민적 입장으로 전진하느냐의 문제가 달린, 즉 民主主義의 成敗가 달린 과제인 것이다.

교육 개혁은 사회 전반의 개혁과 맞물려 실현될 수밖에 없다. 社會의 民主化와 무관하게 敎育의 民主化가 성취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 민주화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교육 내용의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대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양과정의 개편은 반드시 民族民主敎育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양과정의 필수 과목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민족민주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 과목으로 '독서와 비평', '한국민족운동사', '민주주의론', '민족통일론', '한국자본주의론', '핵과 공해'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양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폭 넓게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민족민주교육은 교과과정의 개편만으로 성취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를 소화할 수 있는 교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민주교육의 실현을 가로막는 권력의 방해가 집요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의 개별적 노력으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민주교육에 복무하고 있는 교육자의 조직적 역량으로 반민족·비민주 교육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담당할 청년·학생들과의 교육을 통한 민주적 결합을 통하여 민족교육과 민주교육의 공간을 넓혀 가야 할 것이다. *